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이기수 ■ 국민일보 생활과학부 기자

“**의약분업의** 정신에 위배되는 약사의 임의조제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66%)”

“완전의약분업과 남용방지를 위해 주사제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26%)”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병상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조제실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34%)”

“전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여 약은 약국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36%)”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은 연기되어야 한다(32%)”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보건의료분야 문제를 주로 취급하는 한 웹사이트(MEDIator)가 의약분업에 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오는 7월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을 연기해야 한다고 의약계가 주장하는 이유들 중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들이다.

의약분업은 연기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자는 일부 진보적인 사회단체 외엔 준비가 안돼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대부분의 의사·약사, 국회의원들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다. 더구나 그동안 1차진료 의사의 부족으로 묵인돼 왔던 약사들의 진료행위(약료·藥療)를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약사의 임의조제라는 말이 없어진다. 약사가 줄 수 있는 약은 약의 분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만 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 진짜 좋은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넓어질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온 기회이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지만 새로운 제도를 추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의약품
상 규정된 의약품업 시행일이 오는 7
월로 정해져 있다. 의사와 약사들이
로비로 국회를 움직여 이를 연기하려
는 움직임은 온당치 못하다.

셋째, 의약품업은 의사, 약사, 병원경
영자,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업자들
이 그동안 약을 매개로 누려오던 과
다한 혜택과 잘못된 돈의 흐름을 바
로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리베이트
료', '랜딩비', '할증료' 등 약과 관련
한 비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
리의 현실이다. 이는 '덤'을 바라는
의·약사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의사
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를 거의
인정해 주지 않는 현행 의료제도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
약품업은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
제료를 인정해 주게 됨으로써 이런
부조리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실 의약품업은 이제까지의 관행에
젖은 시민들에게 불편한 제도이다. 자
신이 원하는 약을 아무 때나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의약품
업이 되면 상당수의 경우 의사의 처
방을 받은 후 다시 약국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약품업의 취지와 이 제도
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OTC약(대중약)중 수퍼
판매용을 따로 정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의 분류는 나라마다 매우 다
양하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의사처방
약을 엄격히 규제하는 대신 약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줄 수 있거나 혹은
슈퍼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이 대체로 많다.

하나씩 따져보면 의사도 놀랄 정도
로 매우 다양하고 요긴한 약들을
OTC로 풀어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일반인들의 자가치료기능을 존
중하면서 의료비를 줄이고, 또 의료보
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의사나 약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약품업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의약품업을 전제로 이미 분류해
놓은 것 중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제도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는 이 부
분에서는 조정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
하는 듯하다. 특히 전염성 질환(결핵,
나병, 에이즈)과 같은 질환은 관리의
특수성에 의해 예외조항이나 대안을
필요로 한다.

금년 7월부터 의약품업이 실시될 가
능성은 현재로서는 반반이다. 이 시점
에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잊기 쉬운 국민의 이
익을 우선 생각하는 입장에서 결정해
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는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
은 의약품업이라 생각한다. †